

◆ 政府 施策 ◆

團體隨契 物품 품질향상 적극 誘導

— 通産部, 물량배정때 技術 · 品質 배점 높여 —

통산산업부는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과 관련, 지적돼왔던 부적정한 운영문제를 해소하고 WTO출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노력을 가속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물품에 대한 품질향상을 적극 유도해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단체수의계약물품에 대한 물량배정시 기술·품질수준 배점을 현재 40%에서 50%로 높임으로써 기술개발 및 품질우수업체를 우대하고 품질에 문제가 있는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자격을 점차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요처의 희망에 따라 납품자격업체를 KS나 '품'字 획득업체 등 일정자격을 구비한 업체만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조합 자체의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제도를 활성화해 단체수의계약물품 위주로 오는 97년까지 1천대 이상의 단체표준을 제정토록 유도, 장기적으로 동 규격품에 한해서 단체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수의계약 수수료 수입중 15% 이상을 품질향상 목적으로 사용키로 돼있는 현행 규정을 2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품질향상을 위한 조합의 노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조합 위주의 단체수의계약 품목 품질향상계획을 수립해 향후 관련품목 지정시 참고토록 하고 조합별로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단체수의계약 물품중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물품은 과감하게 대상물품에서 제외해 제도취지에 적합한 최소품목 위주로 동제도를 유지해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통산부는 9월부터 상반기 단체수의계약 점검결과, 부적정하게 운영되거나 단체수의계약 지정요건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전기조합의 특수규격 배전반, 전력공급장치 ▲원심력조합의 PC관 ▲피복조합의 군용모자 ▲과학기기조합의 LCD판넬 등 4개조합 5개 품목을 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중 9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을 위한 점검시 이러한 부적정한 운영사례에 대해 중점 점검해 관련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지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단계적으로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 96년도 단체수의 계약 물품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의견 및 그동안 전문기관 등을 통해 지적된 제도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지침을 개정, 제도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공산품 形式承認제도 대폭 改善 - 33品目 승인대상 除外 175品目は 등록·신고제로 -

현재 16개분야 407개인 형식승인 대상품목중 33개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175개는 등록·신고제로 바뀌며 취득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공산품 형식승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경제행정규제실무위원회를 통해 ‘공산품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 및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공산품 형식승인 개선방안에 따라 형식승인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소방용기기(내부부), 열사용기자재(통산부), 가스용품(통산부)분야 33개 품목이다. 또 전기용품(공진청), 유선통신 단말기·정보기기·무선기기(정통부)분야의 175개 품목은 형식승인이 형식등록·신고제로 전환된다.

항공기(통산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은 국제 수준에 맞춰 개정되고 보호구(노동부), 자동차 제작 인증 및 배출가스측정기기(환경부)분야는 국제인증을 획득할 경우 국내에서의 형식승인이 면제된다.

또 자동차(건교부), 가스용품, 의료용구(보건복지부)의 형식승인은 취득 과정의 검사·시험항목이 축소되고 건설기계(건교부), 가스용품 분야 형식승인은 처리기간이 20~30일에서 5~25일로 단축된다. 또 소방기구와 전기통신기자재·무선기기·전자파 및 전기용품의 경우는 각각 시·도와 한국소방검정공사, 정통부와 공진청에서 이중으로 검정·형식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일원화된다.

中企에 변형근로시간제 허용 — 내년부터 파견직고용도 —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근로시간내에서 하루 및 주당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해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상시고용이 불필요한 전문직 종사자를 파견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키로 하고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법적근거를 명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시간이 특정일이나 특정시기에 몰려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루 및 주당 최고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을 넘을 경우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주당 기준근로시간 범위안에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인건비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超電導技術표준화 본격 추진 — 工振廳, 성장가능성·산업파급효과 막대 —

공업진흥청은 '꿈의 소재'로 불리는 초전도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초전도기술위원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초전도기술의 표준화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초전도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고 국내 표준화활동을 전담할 ‘초전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IEC 초전도위원회에 대응하는 국내 전담기관으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감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공진청은 향후 이들 단체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IEC 초전도기술위원회 정회원 가입 및 초전도의 KS규격 제정 등 본격적인 표준화활동을 전개해가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초전도기술위원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초전도관련 국제규격안의 작성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고 국제규격 제정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식적인 국제표준화 활동국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규격 제정과정에서 선진 회원국들이 제안한 각종 기술문서 및 정보자료를 직접 취득할 수 있어 국내 초전도기술 개발에 필요한 많은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진청이 이번에 IEC 초전도기술위원회 정회원 가입과 초전도 표준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은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막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국제규격의 제정은 선진국 중심의 매우 배타적이고 독점적 성격을 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제규격 제정 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후발참여국은 지속적으로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초전도는 어떤 물질이 일정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말하며 초전도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은 온도의 크기에 따라 저온초전도체, 고온초전체로 나뉜다.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하에서 전기저항이 영인 상태이므로 전기적 손실이 거의 없게 돼 이온으로 전선의 굵기에 관계없이 무한대의 전류를 흘릴 수 있고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적 성질인 자장을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력의 생산·송전·저장설비 등에 폭넓은 사용이 예상되고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 등 의료분야와 자기부상열차 등 수송분야는 물론 고에너지 입자가속기 등 산업전반에 걸쳐 응용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

초전도기술의 세계시장 규모는 현재 1조32000억원에서 2천년에는 7조4천억원에서 10조5600억원, 2010년에는 52조8천억원에서 79조2천억원, 2020년에는 132조원 내지 176조원으로 성장하는 등 2020년까지 연평균 20~22%의 고성장을 보일 전망이다.